

농어촌공, '태양광발전공사' 전환?

2022년까지 7조4861억원 투입 전력 생산, 추진시 '본말전도' 우려... 김종희 의원, "주민 동의 얻어 단계적 추진해야"

한국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본말전도와 함께 공사의 성격을 한국태양광발전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도 대규모적인 투자 계획은 지난 2월 신입 사장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755억원을 투입, 전국 41개 지구에 20M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만을 설치했을 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신입 사장 취임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대폭 높였다.

최 사장은 첨단기술사업처 '에너지개발부'가 전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취임 두달 후인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임원급 본부장)로 승격했다. 본부 산하로는 '에너지개발처'와 '에너지사업처'를, 그 아래로는 각각 3개부를 뒀다.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가 1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확대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협의, 주민 수용성, 인허가 등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확

정, 추진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대폭 확대 등을 놓고 봤을 때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2년까지 4.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중금속 검출과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태양광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농어촌공사의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본말전도'가 우려되고 있다.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지기

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거액을 차입하고 상당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태양광사업에 투입함에 따라 공사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신재생사업에 예산과 자금의 상당부분을 쏟아 부은 농어촌공사가 전력수급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에 직면할 경우 경영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농촌과 농업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회 3선의원을 지낸 정장선 정책직장이 '평택호 태양광 재검토'를 결정한 용단의 의미를 농어촌공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靑 사칭범죄, 터무니없다"

문 대통령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담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건이 연일 발생한다는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6개"라며 "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부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다"고 했다. /뉴시스

이어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례들을 소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칭 사례들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내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태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이 지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급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공공기관 고용세습

'믿는 도끼에 발등'

유성엽 의원, "신규 채용자까지 전수조사서"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고용세습 의혹이 기관을 가리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사천)은 22일 "정부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공공부문 고용세습의 문제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부문 전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며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도 조사대상 기관 10곳 중 8곳, 총 4,788건의 채용비리 관련 지적 사항이 나왔으나 이번엔 불거진 고용세습은 찾아내지도 못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도를 선언한 이후 지난달까지 1년 4개월여 만에 공공부문 기관 853곳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여 명 중 25%인 1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이 확정되었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매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으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주인이 없다는 특성상 비리와 내태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아무리 감시의 눈길

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끝없이 새는 바가지 나 다름없다. 게다가 고위 공무원 자녀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영원하다'는 그들의 카르텔이 이번 채용비리에 한 몫을 했음을 가리킨다. 이에 유 의원은 비효율적이고 내태한 공공부문의 팽창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공공부문의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유 의원은 "이번 공공부문 고용세습의 문제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부문 전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며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도 조사대상 기관 10곳 중 8곳, 총 4,788건의 채용비리 관련 지적 사항이 나왔으나 이번엔 불거진 고용세습은 찾아내지도 못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공공부문은 주인이 없다는 특성상 비리와 내태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아무리 감시의 눈길



국민연금공단 국감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2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술(총회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정내를 정리하고 있다.

민주, 혁신성장특위 등 5개 당내 특위 구성

혁신성장특위 위원장에 추미애 의원 임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현안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혁신성장의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성장의 당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혁신성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의 임명을 의결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 역

사적 전통이자 민족적 가치인 3.1정신을 기반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종걸 의원을 임명했다.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프레임 형성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당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변화대응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우원식 의원을 임명했다.

또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특별전략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현권 의원의 임명을 의결했다.

세대와 지역, 이념, 계층 등 다양한 사회 갈등구조 해결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당의 상설특위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장에 김홍길 문화체육대표상임의장을 임명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장수군 JANGSU COUNTY

아름다운 장수의 가을풍경이 여러분의 추억 여행의 행을 책임집니다!

장수만세

NAVER 장수군청 검색